

2013 국회 9급

행 정 학

해설위원 : 이동호 교수

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베리타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 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만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다음은 2013년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여기에서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를 더 설치하면 100만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 ① 가의성
- ② 합리성
- ③ 투명성
- ④ 동등책임성
- ⑤ 상호보완성

해설 ①

가의성(redundancy)은 중첩성, 중복성, 동등참여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스의 제시문은 행정이념 중 가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줄에서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라는 문장도 힌트가 된다.

0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이다.
-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법이 사용된다.
- ③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 ④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⑤ 문제 상황이 조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해설 ④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득권이익은 보호된다. 그런가 하면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오석홍).

03.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있다.
-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⑤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 ③ 대표관료제는 소의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와 상충할 수 있다. 인사행정의 실제에서 대표관료제의 원리에 따라 우대받는 사람 때문에 보다 우수한 실적평가를 받은 임용후보자가 탈락하는 경우,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 원리가 상충되는 양상이 빚어진다(오석홍).

05.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
- ② 국회
- ③ 행정기관과 관료
- ④ 법원
- ⑤ 대통령과 비서실

해설 ①

정당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비공식참여자에 해당한다.

06.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보조 삭감
- ② X 비효율, 비용증대 - 민영화
-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민영화
- ④ 권력의 편재 - 정부보조 삭감
- ⑤ 정보의 비대칭성 - 규제완화

해설 ②

- ① 사적 목표 설정 - 민영화
- ③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 ④ 권력의 편재 - 민영화, 규제 완화
-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07. 정책분석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다음 중 이론적 미래예측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론지도 작성
- ② 인과관계모델링
- ③ 구간추정
- ④ 시계열분석
- ⑤ 회귀분석

해설 ④

시계열분석은 이론적 미래예측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이 아니라 연장적 미래예측 분석기법이다.

0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
- ②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회를 둔다.

- ④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09.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른 행정책임성이 유형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치적 책임성
② 관리적 책임성
③ 수단적 책임성
④ 전문가적 책임성
⑤ 법률적 책임성

해설 ③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Dubnick & Romzek이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라 구분한 행정책임의 유형에 해당한다.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해설 ④

- ①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자 역할을 했다(새행정학).
- ②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행정의 주요한 가치인 형평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새행정학).

11. 다음 중 학습조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 ② 학습조직에서 전략은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등장된다.
- ③ 학습조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관료제모형의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 ④ 학습조직은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를 강조한다.
- ⑤ 학습조직은 부서 간 경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강조한다.

해설 ⑤

학습조직은 부서 간 경계를 최소화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강조한다(새행정학).

12.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① 협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용이하다.
- ② 네트워크 참여자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적게 든다.
- ③ 통합과 학습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④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 ⑤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용이하다.

해설 ③

- ① 네트워크구조의 단점은 계약 관계에 있는 외부 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새행정학).
- ② 외부 기관의 협력으로 대리인문제가 발생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 ④ ②로 인하여,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⑤ 네트워크구조에서 조직은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고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이직이 빈번하다.

13.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 ② 예산과정상 과다예산요구-대폭삭감의 악순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③ 국회가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정부는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므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되기는 어렵다.
- ⑤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한 예산제도다.

해설 ②

-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는 하지만,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예산상 의사결정권한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로 이해하면 된다.
- ③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각 부처는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 ④ 부처별 지출 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총액 중심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 안에서 부처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재원을 배분하므로 그 결과 부처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테마 행정학).
- ⑤ 종래의 예산은 부처-중앙예산기구 간의 대립, 단년도 중심 편성, 개별 사업 중심의 편성, 예산 투입 중심의 운용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부처와 중앙예산기구 간의 계급은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중장기적 시각의 재정 운영이 곤란하다. 또 개별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차원의 재원 배분이 불가능하다. 예산 투입 중심의 운용은 재정의 사후 성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이다.

- ☑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출한도 등 거시적인 요소는 재정당국이 통제하므로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 ③ 국회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지만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하기 쉽다.
- ⑤ 개별 사업위주의 단년도 재정운영보다는 중기적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제도이다.

1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해설 ⑤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창출하면서도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될 수 있는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이 있다. 행정규제는 정기노선 버스회사나 대체교통수단을 장려하는 데 주로 사용하며, 조세 유인제도는 특정 조합이 자신들의 쓰레기 수거나 도로 청소 등을 장려하는 데 활용한다(새행정학).

15.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총괄적 평가는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진행평가라고도 한다.
- ②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bias)은 구성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 ④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 ⑤ 준실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해설 ④

① 설문은 과정평가·도중평가·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리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에 대한 내용이다.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과연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인데 정책효과성 평가라고 할 수 있다(새행정학).

② 설문은 포괄적 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bias)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선발(selection) 요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⑤ 진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16. 동기부여이론과 그 활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① A부서는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라 선택적 복직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원들의 기대감(expectancy)을 높였다.
- ② Herzberg의 2요인이론에 따르면 동기요인인 보수보다는 위생요인인 성취와 인정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므로 B부서는 모든 직급과 연령대의 구성원들에게 보수의 향상보다는 성취와 인정을 느끼는 방안을 도입했다.
- ③ C부서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라 직무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기부여를 향상시켰다.
- ④ D부서는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라 준거인물을 설정할 수 없도록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 ⑤ E부서는 Herzberg의 직무확충이론에 따라 표준운영절차(SOP)를 강화했다.

해설 ③

① 일정한 노력(effort)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performance)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expectancy)이라 한다. 일정한 노력과 관련된 것이지, 제도 도입과는 관계가 없다.

② Herzberg의 2요인이론에 따르면 위생요인인 보수보다는 동기요인인 성취와

인정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므로 B부서는 모든 직급과 연령대의 구성원들에게 보수의 향상보다는 성취와 인정을 느끼는 방안을 도입했다.

④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준거인물이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비교하는 대상인물을 말한다. 애덤스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행위는 타인(준거인물)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

⑤ 직무확충이란 직무의 수평적 강화를 의미하는 직무확장(job enlargement)과 직무의 수직적 강화를 의미하는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직무확충이 이뤄짐으로써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는 직무를 각자의 개성적 의식에 따라 수행하는데 높은 충실감과 책임감을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

SOP는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구조에서 조직이 존속해 오는 동안 경험적으로 터득한 학습된 행동규칙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이 이에 준거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직무확충과는 상충하게 된다.

17.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전체 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해설 ③

ㄱ, ㄷ은 맞고 ㄴ, ㄹ은 틀리다.

ㄴ.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이란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한 유형이다. 이는 총괄예산이나 캔나다의 지출대예산(envelope budget)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ㄹ. 통합재정은 정부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8.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갈등집단 간의 권력균형 유지
-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 ③ 상황의 호도
-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
- ⑤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해설 ①

①은 대응행동이 아니라, 정책딜레마를 조성하고 증폭시키는 조건에 해당한다.

19.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의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④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해설 ②

예산의 이용(移用)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②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사기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설 ④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선 전통적으로 선물 관행이나 보은 의식과 인사문화가 있는데, 이를 공무원 부패의 한 원인이라고 할 경우 이것이 바로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공무원 부패를 파악하는 것이다.

② 백색부패와 같은 유형의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부패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색부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늘어난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새행정학).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거래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사기형 부패는 공공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